



유대인 혐오 주장
비판
8~9면

전공의
파업
6면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려는
윤석열 정부
10면

총선 결과로
대일 외교 바뀔까?
11면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
12~13면



이란과의 전쟁 위험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



관련 기사 2~3면

이란의 응징을 라파흐 공격의 빌미 삼으려는 이스라엘

4월 14일 새벽 2시(이하 현지 시각)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데 대한 응징이다.

이란은 “통제되고 비확장적”으로 공격했다. 무인기 170기, 순항미사일 30발, 탄도미사일 120발 등 약 320개의 무기를 발사했다.

같은 날 레바논 헤즈볼라도 골란고원에 있는 이스라엘군 기지를 향해 로켓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 골란고원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래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란의 응징은 모두 이스라엘 탓이다.

이스라엘은 4월 1일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군 장성 등 13명을 살해했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도 계속 폭격해 왔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레바논에서 숨진 헤즈볼라 대원과 민간인은 371명이다.

이스라엘은 4월 7일 아예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을 준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 북부 전선에서 헤즈볼라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 또 다른 조처를 완료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인종 학살에 대한 세계인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 가자지구를 넘어 확전을 시도해 왔다.

헤즈볼라와 이란은 그동안 말로는 이스라엘을 비난하지만 전면전을 피하려 애써 왔다. 자국의 “국익”을 위협에 빠뜨릴까 봐 “전략적 인내”를 하며 “저강도” 대응을 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과 부패한 아랍 정권은 이스라엘을 편들었다.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폭격 때도



이스라엘군이 F-15 람 전투기에 다목적 폭탄 'MPR500'을 장착하는 모습

미국 등 서방(“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전혀 규탄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소집에도 반대했다.

그래 놓고는 이란이 응징 공습을 하자 미국·영국·프랑스·유럽연합은 신속하게 이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도 서방에 장단을 맞춰 이란 규탄 성명을 냈다.

서방은 아예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이스라엘군은 미국·영국·프랑스와 요르단의 지원을 받아 이란의 무기들을 “99퍼센트” 격추시켰다고 밝혔다.

지금 이스라엘은 보복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14일 오후 회의를 한 결과 다수가 보복에 찬성했다. 그러나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려 추후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로이터 통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일에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은 핵보유 국가인데, 이란의 응징이 있기 며칠 전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는 모의 훈련을 했다(아랍권 매체 <엘라프 뉴스>, 4월 8일 자).

바이든과 네타냐후는 가자 전쟁을 둘러싼 전술적이전 때문에 다소 긴장이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그러나 그

학살이 중동에서 자국의 이익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아랍 정권들의 안정을 해칠까 봐 두려워한다.

안 그래도 미국의 중동 통제력이 약화돼 온 틈을 타고 서로 경쟁하는 지역 강국들(이란·사우디아라비아·튀르키예·이스라엘 등)이 부상한 것 때문에 미국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네타냐후는 가자에서 전쟁을 확대해 바이든 정부와 다시 밀착되고 싶어 한다.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헤즈볼라 등)을 공격하면 미국 등 서방과 일부 아랍 정권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란의 응징 이후 미국 등 서방은 가자지구의 학살이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응징을 받은 이스라엘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드론 공격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드론 공격을 비난했다.

물론 바이든과 네타냐후 사이의 전술적 긴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바이든은 네타냐후가 미국을 좀 더 큰 전쟁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다는 우려를 사석에서 표명했다(미국 NBC 뉴스).

한 백악관 고위 관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바이든이 네타냐후에게 말했다.

“바이든이 총력전을 벌인다면 그 경

제적 여파, 유가 등 대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의 재선 노력이 위협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긴장이 존재할지라도 미국은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철통같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란이 공격한 다음 날 미국 연방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대(對)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 처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요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타냐후 정부는 이란의 응징을 빌미로 가자지구 총력전을 벌이려 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총력을 다해 가자지구에서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이스라엘 총리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지상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해 온 라파흐가 위험하다.

CNN은 이렇게 지적했다(4월 6일 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옵션들은 대다수 이스라엘인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가자지구를 무기한 계속 점령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자지구에서 철수해 하마스를 (표면상 가자지구의 공식 통치 세력이든 아니든) 현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반네타냐후 시위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야당 지도자 베니 간츠도 네타냐후와 마찬가지로 출구 전략이 없다고 한다.

“베니 간츠는 이번 주에 조기 총선을 촉구했고 이스라엘인들이 투표하면 다음 총리가 될 것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는데, 그는 네타냐후 전시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가자지구, 이스라엘의 미래, 팔레스타인 또는 팔레스타인인의 주권에 대한 간츠의 구상도 별로 다르지 않다.”

김인식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에 “자중”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를 자극하는 언행과 군사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둘 다에 (평화주의적인) 양비론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단순히 공평무사한 양비론인 것도 아니다. 이란의 공습이 중동확전을 부를 주된 원인인 양 서술하는 대목도 있다. “이란의 공격으로” … 인

해 중동 지역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현 상황의 본질을 그릇되게 파악하고 있다.

이란의 이번 공습은 응징 성격이었다. 이스라엘이 4월 1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격 목적은 두 가

지였다.

첫째, 가자지구의 전쟁 범죄로부터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하마스와와의 전투를 소위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과 벌이는 투쟁의 일환처럼 만들려 했다.

둘째, 가자지구에 대한 폭력을 다소 완화하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지하도록 만들려 했다.

미국의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썼다. “[이란의] 이번 공격은 서방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적어도 바이든과 그의 동료 민주당 의원들이 가자지구를 둘러싼 이스라엘과의 냉전을 끝내고 이것이 실은 이란과의 전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했다.”

네타냐후는 소기의 목적을 이룬 듯하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란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이란과의 전쟁 위협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이스라엘 극우 정부 사이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체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있다.

4월 1일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의 부속 건물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장교 2명 등을 살해했다. 외교공관을 공격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그 공격은 1979년 이란 혁명 이래로 양국의 관계를 지배한 이른바 “그림자 전쟁”의 확전 행위이기도 하다.

2000~2005년 중동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낸 폴 필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의 인종 학살 전쟁에 실패하자 “확전을 통한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그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확전에는 두 요소가 있다. … 주된 것은 이란을 도발해서 보복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공격자가 아닌 방어자로 내세울 수 있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파괴를 둘러싼 논쟁을 이스라엘도 외적에 맞서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돌릴 수 있다.

“또 다른 요소는 이란과 대결하면서 미국이 직접 관여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스라엘이 4월 1일 공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 공격은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게 직접 항의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위신이 걸린 힘겨루기 속에서 이란은 보복에 나서지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번 대치 국면에서 자신이 득을 봤다고 여겨 더 한층 폭력적으로 나올 위험이 있다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란은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다. 전면전을 벌였다가는 최근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 회복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필러는 “대체로 이스라엘이 먼저 폭력을 시작하고 이란은 대응하는 비대칭적 패턴”을 지적한다. 이란은 지난 토요일(13일) 밤 대응에 나섰는데, 최초로 이스라엘 본토로 300기가 넘는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이스라엘에 따르면, 이 미사일들과 드론들은 거의 다 중간에 요격됐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서방의 도움을 받았다. 영국 외무장관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란이 “이중의 패배”를 겪었다는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

서방의 지지

안보 전문가 에밀 호카엠은 이렇게 지적한다. “이스라엘의 이번 성공은 이란의 충분한 사전 경고와 미국, 영국, 프랑스, 요르단, 그 외 아랍 국가들의 조력 덕분이었다. 이번 작전은 이스라엘이 수개월간 자신이 업신여긴 파트너들에게 정작 안보를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그 미사일과 드론을 대부분 요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음에 틀림없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 정권 내부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이번 공습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억제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적당히 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번 공습은 전시효과를 노린 행위였다. 전면전을 원했다면 이란은 훨씬 많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압도하려 했을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대응을 관찰하면서 향후 공격에 유용한 정보를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조 바이든은 재빨리 승리를 선언하고는 선을 그었다. 바이든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려고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군함 두 척을 보냈고, 이란의 공격이 지나간 뒤 네타냐후에게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응에 관해 “충분히 숙고하라”고 조언했다.

한 “고위 관리”는 <워싱턴 포스트>에 이렇게 전했다. “아무도 확전의 사다리를 타고 싶어 하지 않는다. …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은 일절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우선순위는 중국을 상대하는 것이다. 지난주 바이든은 이스라엘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뿐 아니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안보 의지도 “철통같다”고 선언했다. 필리핀은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이다.

한편,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에 맞선 동부 전선의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고 시인했다. 그런 만큼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을 극구 피하려 한다.

네타냐후는 어떻게? 별로 그렇지 않다. 호카엠은 네타냐후에 관해 이렇게 지적한다. “네타냐후에게 이번 공격은 결과적으로 이익이었다.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잔혹한 군사 작전에 대한 비판이 지난 몇 주 동안 커지던 가운데 서방의 지지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번 판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앞으로 위기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더 무릅쓰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공격을 허용하지 않겠다면 라파흐 공격은 허용해 달라고 네타냐후가 미국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국이 끝내 이스라엘에 만만찮은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면 폭력의 소용돌이가 또 한 차례 고조될 것임을 예상하라.

출처 Alex Callinicos, 'Blame Israel for the threat of war with Iran' (2024.4.15) / 번역 김중환

공격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을 지지했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의 위협에 맞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다.

미국 등 서방 지배자들은 이란 대중이 1979년 혁명을 일으켜 친서방 팔레비 왕정을 타도한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동 지역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오히려 이스라엘

(과 미국 등 서방)에 있다.

참여연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동의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에 이어 이란까지 3개의 전쟁을 동시에 감당하는 게 버겁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시사하는 것과 달리 미국은 중재자 구실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이번 이스라엘-이란

충돌에서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편들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렇게 꼬집었다.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으면 … 유엔 안보리에서 먼저 규탄 성명을 발표해 줘야 돼요. … 영국과 미국이 당연히 앞장서서 해 줘야 했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편을 들다 보니까 … [이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걸 막지 못한 건 미국의 큰 실책이죠. 그래

놓고 지금 확전을 막겠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게 어쩌면 사실 모순적인 겁니다.”(YTN, 4월 14일 자)

바이든의 “모순”돼 보이는 행보는 중동에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지키는 데서 이스라엘이 결정적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색을 보지 못하고 위선적 분식(粉飾)에 순진하게 미혹되는 것이다.

김인식

이스라엘 극우파의 위험한 계획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인종학살이 네타냐후와 그의 극우 동맹 탓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 글에서 롬 퍼거슨은 이스라엘 극우의 정치를 설명하면서 노동당 시온주의자 등 다른 야당도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롬 퍼거슨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에서 활동하는 유대계 혁명적 사회주의자이다.

이 글은 이번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2023년 7월에 쓰였다. 여기서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잔혹함과 극우의 정치, 이스라엘 내부 정치 위기는 전쟁으로 더 두드러지게 됐다.

이달(2023년 7월) 초 제닌 난민촌에 대한 이스라엘방위군의 공격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 인종 분리 체제의 잔혹한 현실을 드러냈다. 공습과 함께 지상군이 투입돼 집과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됐다.

이번 잔학 행위는 1948년 나크바(대재앙) 이래로 지속되는 폭력적 강탈 역사의 가장 최근의 사례다. 당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7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인종 청소를 당했다.

그러나 최근의 폭력 행위는 유대인 우월주의 세력들이 더 한층 부추긴 결과라는 측면도 있다. 이들은 2021년 5월에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반란과 계속되는 저항에 격분했다.

지난해 [2022년] 11월 선거에서 극우파가 주류 세력으로 부상했다. 정당 ‘유대인의힘’의 지도자 이타마르 베그비르는 현재 국가안보장관을 맡고 있다. 베그비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대 앞에서 자신의 총을 꺼내 위협하고,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군인이 사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자이다.

유대인의힘 선거 유세 집회에서는 “아랍인들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선거연합체] ‘종교적 시온주의’를 이끌고 있는 베잘렐 스모트리치는 이스라엘 건국자 다비드 벤구리온이 “1948년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다”며 나크바가 더 나아갔어야 했다고 내비쳤다. 스모트리치는 자신이 파시스트



이스라엘 정치 세력들 모두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동성애혐오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극우파 정부의 당선은 이스라엘 정착자 집단 내부에서 분열을 촉발시켰다. 참가자가 24만 명에 달하는 시위가 벌어져 베냐민 네타냐후 연립 정부와, 그 정부가 이스라엘 대법원을 직접적인 정치적 통제 아래 두려 하는 것에 반대했다.

이 시위에 팔레스타인인들은 없다. 시위를 이끄는 자들은 이전 정부하에서 인종 분리 국가를 유지하는 데 앞장섰던 핵심 정치 인사들이다.

모든 시위에서 시온주의 국가에 충성을 보여 주는 이스라엘 국기가 물결친다. 팔레스타인 깃발을 든 소규모 단체들은 동료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 반정부 시위대는 네타냐후 정부가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 정신을 벗어났고,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팔레스타인인도 인정할 수 없는 설명이다. 대법원 자체가 판결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억압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유대인 국가의 시민권은 역사적 팔레스타인 내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강제적 배제와 강탈, 그리고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의 귀환권*을 거부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건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식민지를 개척하고 무장력을 갖추기 위해 정착자들의 연이은 집단 이주를 받아들였다. 먼저 홀로코스트를 전후해 반유대주의로부터 피난처를 찾고 있던 유럽계 유대인들이 왔다. 그들의 뒤를 이어 1940년대와 1950년대 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미즈라힘” 또는 세파르딤계 유대인들이 들어왔다.

추가로 소련과 러시아에서 유대인 120만 명이 정착 물결에 합류했다. 새로운 정착민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요구가 생겨나 정착자 식민 사회 내에서 경쟁했다. 이에 따라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 내에 다양한 정당이 출현해 저마다 특정 이해관계를 주장하며 특권을 얻어 내려 했다.

이스라엘 정착자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를 둔 이러한 분열은 이제 성소수자와 여성의 권리, 세속 대 종교, 심지어 어떤 혈통이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착자 식민주의

이러한 동역학과 함께 이스라엘의 정치 스펙트럼은 거침없이 우경화했다.

노동당 시온주의자들은 국가 기구들을 세워 1948년부터 1977년까지 정부를 이끌었지만, 오늘날에는 한물간 세력이 됐다. 이들은 11월 선거에서 간신히 4퍼센트를 득표했다. “좌파” 시온주의자들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종교적 시온주의자들’(베잘렐 스모트리치와 베그비르가 속해 있다)은 “아랍인들에게 죽음을”을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강력한 지지를 얻었다.

이러한 노골적인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는 한편으로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에 대한 대응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외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에 있다. 1948년 이후 약 20년 동안 팔레스타인인들은 정복된 것처럼 보였다. 이스라엘 총리 골다 메이어는 “팔레스타인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

다”는 악명 높은 선언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8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중대한 저항이 분출했다. 그 중에는 인티파다로 알려진 두 차례 대중 봉기도 있었다.

팔레스타인인을 굴복시키는 문제는 시온주의 국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후원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미국 군사원조의 가장 큰 수혜자로 1945년 이래 누적으로 총 1600억 달러를 받았다.

또한 미국은 아랍 정권들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독재 정권들은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취약하다. 반면 이스라엘은 정착자 식민 국가라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가는 스스로 해체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요새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팔레스타인인의 투쟁이 더 광범한 반란을 고무할까 봐 두려워한다. 2011년에 팔레스타인은 아랍 혁명을 관통하는 끈이었다. 그 해 ‘나크바의 날’(5월 15일)에 수많은 시위대가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 국경에 접근하거나 경계를 무너뜨리려 했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제국주의적 이해관계의 요새로서 이스라엘을 방어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투쟁이 광범한 반제국주의 반란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도 막으려 한다.

이것이 그들이 ‘팔레스타인 소국가’ 건국이라는 두 국가 방안을 지지한다고 말하는 데 열심인 이유다. 그러나 두 국가 방안은 언제나 신기루였다.

어떤 이스라엘 정부도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용납한 적이 없다. 현 정부와 야당뿐 아니라 어떠한 이스라엘 정치 세력도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대한 통제권을 양도하지 않을 뿐더러 가자지구 봉쇄도 끝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을 지배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의 지원을 계속 얻어야 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인을 지배하려면 영구적인 충돌과 서안지구 군사 점령을 피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서안지구를 공식적으로 병합하고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대안은 정착자 식민 국가의 근간 자체를 위협할 것이다. 이스라엘 극우파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 5면으로 이어짐

용어설명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권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나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 난민 수백만 명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올 마땅한 권리. 이스라엘은 이것이 자신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거론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게 소환장 발부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탄압 말라

경찰이 집시법을 위반했다며 한국인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최영준·김지윤·최미선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에 열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기자회견을 문제 삼았다. 그 전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알아흘리 침례병원을 폭격해 500명을 넘게 살해하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알아흘리 침례병원 폭격 소식이 전해지자, 이라크·요르단·레바논·튀르키예·튀니지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분출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등 아랍인들과 한국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병원 폭격과 이스라엘의 학살을 지원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찰이 미신고 집회라고 문제 삼은 10월 18일 가자지구 병원 폭격 규탄 긴급 기자회견

그런데 종로경찰서는 당일 기자회견에 대해 미신고 집회라며, 6개월이나 지난 일로 주최측인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소집권자 최영준 씨와 기자회견 사회자 김지윤 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이태원역 앞에서 있었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의 소음 기준 초과를 근거로, 용산경찰서가 최미선 노동자연대 활동

가에게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6개월째 굳건히 지속되며 지지를 받는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대한 공격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벌어지면서 한국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급격히 높아져 왔다. 서방 제국주의와 보조를 맞춰 온 윤석열 정부로선 이런 대중 정서가 거북할 테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를 표현하고 확대하려 애써 온 것이 눈엣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이런 공격은 총선을 의식해 지난 몇 개월간 우익적·권위주의적 행태를 자제해 온 윤석열 정부가 공격을 재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공격에 맞선 효과적인 저항은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지속·강화하는 것이다.

신정환

▶ 4면에서 이어짐

2017년 스모트리치는 자신이 만든 "회심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의 수립에는 중요한 진실이 전제돼 있었는데, "유대인 국가의 존재와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열망 사이의 모순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다.

스모트리치는 둘 사이의 평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썼다. 그가 주장한 해결책은 모든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은 자신의 권리를 부정하는 대(大)이스라엘을 받아들이거나 돈을 받고 떠나는 것, 아니면 계속 저항하다가 살해되는 것이다.

이것이 스모트리치와 벤그비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이다. 종교적 우파는 국가 구조 내에서 입지를 굳히는 동시에 아래로부터 대규모 폭력을 결집하려 한다.

최근의 팔레스타인인 학살 운동 동안 벤그비르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약속하신 땅'에 뿌리내리고, 건물들을 부수고,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명, 필요하다면 수천 명을 제거해야 한다."

시온주의 지배층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당국을 존속시키는 데에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주민

을 통제하고 억눌러 준다. 그러나 스모트리치와 벤그비르는 팔레스타인 당국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서안지구를 병합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현재 상태가 팔레스타인인에게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고 그 때문에 유대인 국가를 도전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여긴다. 그리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종 우월주의의 전초 기지로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모두 포괄한다고 선포하고 싶어 한다.

[2023년]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국가 기구들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권을 두고 쟁투가 벌어지고 있다.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강탈을 어떤 식으로 지속할지를 두고 분열해 있어서다. 극우파와 이스라엘 국가의 여러 부분 사이에 험악한 적대감이 드러나는 것은 이때문이다.

그럼에도 미국과 그 동맹국으로서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자치"를 용인하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허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모트리치와 벤그비르의 우월주의적 종교 이데올로기는 역사적 팔레스타인 전체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만, 이는 제국주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고 정착민 사이에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여러

부류는 팔레스타인인들을 강탈한다는 한 가지 점에서는 단결돼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설명과는 달리 이스라엘 극우파는 일탈이 아니라, 시온주의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시온주의 프로젝트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저절로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 아랍 지배자들이나 이스라엘 정착자들에게 해결책을 기

대할 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아랍 혁명과 글로벌 반제국주의 운동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모든 주민이 평등하게 살고, 모든 팔레스타인인의 귀환권이 보장되는 단일한 민주적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출처 Rob Ferguson, 'Pernicious plans of Israel's far right' (2023. 7. 16) / 번역 김재현

노동자연대 TV

이스라엘 반정부 시위 분출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한 축이 될까?

4월 24일(수) 오후 8시

발제 톰 퍼거슨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으로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해 왔다.

- 영국 전쟁저지연합 전국운영위원
- 팔레스타인연대캠페인(PSC) 활동가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가자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노동계급과 좌파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온주의에 반대하는 유대인 활동가인 톰 퍼거슨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봄에 이런 주장에 답하고 변화를 가져올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룰 것입니다.

참가신청 bit.ly/0424-meeting



전공의 파업 60일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원점 재논의”라고 밝혔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는 최근 갈등을 빚은 의협 비대위원장과 신임 의협회장, 전공의협의회 비대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협 비대위원장과 신임 회장 사이의 갈등은 증원 자체에 반대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의 갈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임 의협 회장은 비대위 측이 정부와 증원 협상을 하려 한다고 의심한 듯하다.

의협 내에서 오랫동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것을 고려하면, 비대위 측은 총선을 앞둔 여당을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듯하다.

반면 신임 의협 회장 임현택은 증원 은커녕 최대 1000명을 감원해야 한다는 강경파다.

14일 발표에서는 증원 규모에 대한 언급 없이 “원점 재논의”로 정리됐다고 한 것으로 보아 강경파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공의 대표 박단이 12일 밤에 대학병원과 교수들을 저격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벌어졌다. 병원들이 “문제의 당사자”이며, 교수들이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고, “의료 체계의 상업화, 시장화를 방치해 온 국가의 책임이 지대하다”는



한산해진 대학병원. 필수재인 의료를 시장에 내맡겨 온 것이 지금의 답답한 상황을 낳았다

내용이었다.(해당 내용은 김명희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이 <한겨레>에 기고한 글 내용의 일부를 옮긴 것이었다.)

병원협회 측이 12일 열린 정기총회에 복지부 차관 박민수를 초대한 일과 의대 교수들이 중간에서 중재자 노릇을 해 온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에 대한 전공의들의 불만은 특별히 크다. 전공의 1360명은 박민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고 “박민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가 각별히 권위주의적이고 냉소적인 언사를 일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의교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은 “의대 증원 백지화가 '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한간부는 전공의 대표에게 윤석열을 만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가 반발을 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사직 엄포만 놓고 실제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도 작용한 듯하다.

병원 측과 교수에 대한 전공의 측의

비판에서는 계급적 불만이 강하게 느껴진다. 이런 불만은 점차 더 적절하게 제기될 수도 있다.(관련기사 : 본지 494호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금은 그 불만의 화살이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에서 교수들과 병원 측을 비판하고 있다.

현 사태는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통 전가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진료 접수 자체를 줄이고 있다. 전공의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남아 있는 의료진도 대폭 줄어든 환자와 느려진 속도에 적응하고 있는 듯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뺨뺨이를 돌다가 결국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다.

수술과 항암치료 시기가 멀찍이 미뤄진 암 환자, 혹시나 예약이 미뤄질까 걱정하는 희귀병 환자, 원치 않는데도 하급 병원으로 가게 된 환자 등이 있다. 급하지는 않아도 관절 수술 등을 예약한 노인들이 수술을 포기하거나 참고 미루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모두가 불안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의대 증원이라는 조처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하에서 이런 인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윤석열은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도움이 될 개혁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고 더 많은 자본가들이 의료 '시장'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데 골몰해 왔다.

의대 증원도 대형 병원의 인력난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그조차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고자 졸속으로 내놓은 정책이었을 뿐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보완책일 뿐이다.

빅5 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은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며 그 부담을 병원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윤석열은 그렇게 아끼던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 원을 이 병원들의 적자를 메우는 데 쏟아붓고 있다. 윤석열의 강경대응을 응원하던 친자본 언론들은 대형 병원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이제는 은근히 타협을 촉구하고 있다.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진정한 해결책이 없이) 이 혼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만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며 “실효적 대안”을 강조했다. 증원 규모를 줄이자라는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그는 “400~500명 정도가 현실적”이라며 증원 규모를 축소하자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정도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공백이 해결될 리도 없거니와, 전공의와 의협 등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실패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오히려 공공의료에 대한 지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게 팬데믹 때였다. 당시 정부가 공공의료에 대폭 투자했다면 지금 일부 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증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장 논리와 기업 이윤 추구에 도전하는 노동자 대중(전공의와 간호사가 꼭 포함된) 운동만이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유학생 돌봄 취업 허용 방안 최저임금 적용 제외 말라! 자유로운 취업 허용하라!

4월 4일 윤석열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돌봄 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로 돌봄서비스 필요가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를 무조건 환영한다. 그러나 윤석열이 추진하는 방안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책임을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대신 때우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의 부모(부모가 불가능할 경우 성년인 형제 자매 등)는 '자녀양육지원 방문동거 비자'(F-1-5)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매년 갱신해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고 취업은 금지돼 있다. 예외로 계절근로자 제도로 농어업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또, 유학생은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 업종에서 한국어 성적과 이수 중인 과정(어학연수, 학사, 석·박사)에 따라 주 20~35시간만 취업이 허용된다. 다만, 어학연수생 이외에는 방학 중에 시간 제한이 없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이들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으로 고용하는 가사돌봄 노동자)으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는 가사사용인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3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돌봄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두 가지 중 하나다. 윤석열은 그 대상을 결혼이주민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민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의 물가 수준에 맞는 생계비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전월세 거주 1인 가구 생계비는 2022년 기준 월 241만여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206만여 원(시급 9860원)보다 높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면 적잖은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정부 방안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균불을 때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대체로 부모)은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스스로 충분한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가 부양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유학생도 정부의 취업 업종과 시간 제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예컨대 어학당의 한 학기 등록금은 보통 150만 원 수준으로, 1년 4학기에 600만 원이나 든다. 정부가 정한 제한을 지켜서는 현실적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꿈수

정부가 대학들에 이를 막으라고 요구하면, 대학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유학생들을 단속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킨 만행을 저지른 것도 이런 맥락에서 벌어진 것이다.

무책임한 정부와 유학생 유치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대학들 때문에 애먼 유학생들이 무시받고 고통받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내놓은 것에는 최저

임금 차등 적용에 균불을 때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돌봄 업종에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나면 정부와 사용자들은 곧이어 다른 업종도 그렇게 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임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윤석열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라며 이런 꿈을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저임금 일자리 늘리기는 국가의 돌봄서비스 책임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일 뿐이다. 국가가 이주노동자를 수입해서라도 노동계급 가족의 돌봄(재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것 자체가 임금 인상과 복지 증대 압력을 완화하려는 수작이다.

돌봄 비용이 낮아져도 노동자들의 임금이 안 오르면 조삼모사일 뿐이다.

정부가 이주민의 자유로운 생계 활동을 제한해 놓고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 열악한 처우나 노동조건을 강요하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과 유학생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협상력을 높여 임금과 조건을 개선할 여지도 생긴다. 그리고 노동계급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국가의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인 우선 고용?

윤석열이 이번 방안 추진을 발표하자 한국노총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나 유학생이 언어소통이 어렵고 아이를 키워 본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돌봄 노동할 능력이 없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도입 업종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에도 이를 반대한 바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도 이주노동자보다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우선해야 한다고 시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4월 9일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가 돌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것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돌봄 이주노동자 확대 자체를 반대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고, 저임금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은 규탄하고 반대하되,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고 고용되는 것은 환영해야 한다.

취업난과 저임금은 이주노동자 탓이 아니다. 일자리와 임금 수준은 경제 상태와,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맞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싸우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이주민의 국내 취업을 반대하면 이주민은 한국 노동조합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실업과 저임금에 대한 불만을 정부와 사용자가 아니라 이주민에게 돌리게 되겠다. 이는 단결을 해칠 뿐, 효과적인 생계비 저항에는 도움이 안 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려면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한국인이든 이주민이든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대폭 개선돼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며, 필요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 지출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

임준형

유대인 혐오 주장과 그렇지 않은 주장 주요 논박과 피해야 할 함정들

김중환

친이스라엘 세력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이 유대인 혐오라고 공격한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도 비

슷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자들이 퍼는 대표적 주장에 대한 논박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유대인 혐오라는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피해야 할 함정도 살펴려 한다.

이스라엘 비판이 곧 유대인 혐오인가?

“유대인 혐오”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을 겨냥한 위험한 무기가 된다. 오늘날 파시스트 사이에서 실재하는 유대인 혐오는 다음과 같은 망상이다.

‘유대인은 나머지 인류와 다르다. 그들은 인류의 적이고, 가는 곳마다 자신만의 “국가 안의 국가”를 꾸린다. 그들은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공모하고 있으며, 여타의 인민이나 사회 구성원들을 제물로 삼으려 한다. 그들에게는 묘한 능력이 있어서 적은 인원으로도 사건을 배후 조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운동은 오히려 그 반대임을 알 수 있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유대인이 인류의 적이기는커녕 오래 전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 왔고, 팔레

스타인에서도 아랍인과 유대인은 오랫동안 공존해 왔다고 강조한다.

뒤에서 보겠지만, ‘유대인은 나머지 인류와 공존할 수 없다’는 주장에 타협하는 쪽은 시온주의자들이다.

또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모든 유대인의 비밀 공모를 주장하기는커녕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최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주최한 집회(제30차 집회, 4월 13일)에서도 한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아파트헤이트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비판은 유대교나 유대인이 아니라, 시온주의자들과 그들의 정치 조직인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것이다. 유대인 혐오가 아니다.



‘유대인 혐오’ 비방에 제대로 맞서야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유대인 혐오인가?

이스라엘 국가라는 정치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유대인들이 모두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과 전혀 다른 것이다. 본지는 오랫동안 역사적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서 아랍인과 유대인 등이 민주적이고 비종교적인 단일 국가 안에서 평등하게 공존하는 방안을 지지해 왔다. 이런 대안으로만 팔레스타인인 난민이 귀환할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이스라엘 거부’는 유대인 혐오라는 주장은 이런 정치적 대안이 진지하게 고려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막음 전술이다.

이스라엘 국가의 진정한 실체는 식민 정착자 국가이다. 식민 정착자 국가는, 외부에서 정착자를 이주시켜 원주민을 인종청소하고 세우는 국가이다. 역사적으로 미국, 호주, 백인 치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대표적인 경우였다.

따라서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원주민들이 “존재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는 토지 강탈과 자국 내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과 인종청소, 그렇게 해서 쫓겨난 수많은 팔레스타인인 난민들의 귀환할 권리

박탈을 전제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식민 정착자 국가는 결코 원주민 국가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 식민 정착자 국가인 이스라엘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두 국가 방안’을 현실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미국과 호주는 결국 원주민을 말살에 가깝게 살육했고, 살아남은 원주민들은 지금도 천대받고 있다.(반면 남아공에서는 투쟁으로 인종 분리 제도가 타도됐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팔레스타인인이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런 진실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스라엘의 현재 극우 정부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정착자 다수가 팔레스타인인인 억압을 지지하는 것도 식민 정착자 국가가 원주민과 끊임없이 전투를 치러야 존재할 수 있다는 물질적 현실에서 비롯한 결과이다.

팔레스타인인의 독립 국가 건설과 팔레스타인인 난민의 귀환권을 일관되게 지지하려면 ‘이스라엘 국가에 존재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거부해야 한다.

시온주의는 유대 ‘민족’의 (정당한) 자기결정권인가?

오늘날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유대인의 오랜 독립 국가 염원이 실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참말이 아니다.

이스라엘에 정착한 유대인의 압도 다수는 원래 유럽 등 중동 바깥에 살았고 무엇보다 홀로코스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별도의 유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 차별은 있었고 특히 유럽에서 심각했지만, 기존 거주국을 떠나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오히려 질색하는 유대인이 더 많았다.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은 더욱 소수였다.

예컨대, 1910년대에 영국 정부가 뱌푸어 선언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당시 유력한 유대인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격하게 반발했다.

“시온주의 이론의 근간을 이루는 주장은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 공동체들

이 단일한 ‘고향을 잃은 민족’을 이룬다는 것,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민족 말고는 다른 어떤 민족 안에서도 사회적·정치적으로 동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고향을 잃은 민족’이 정치적 중심을 필요로 하고 팔레스타인의 ‘빈 땅’에 고국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에 우리 공동위원회는 아주 강력하고 신실한 항의를 표하는 바이다.”(영국유대인대표자회의-영국유대인협회 공동위원회의 <런던 타임스> 기고글, 강조는 <노동자 연대>지의 것.)

유대인이 차별받는 인종이라는 것은, 독립 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민족이라는 것과는 별개인 것이다. 시온주의는 결코 유대인의 자연스러운 ‘민족’ 감정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단일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시온주의자들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시온주의와 이스라엘 반대 운동에서 아랍인 등과 함께 하는 유대인들

홀로코스트가 이스라엘 국가의 필요성을 입증했는가?

시온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가 남긴 교훈이 '유대인 국가만이 유대인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오히려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던 시온주의 지도자들은 홀로코스트 당시에 유대인들을 실제로 구하는 것이나 나치에 맞서는 저항에서 전혀 일관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히틀러에게까지 기회주의적으로 접근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다른 시온주의자 포함) 사이에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이스라엘 국가에 비판적이었고 팔레스타인인의 해방 운동에 연대를 생전에 표했거나 지금도 표하고 있다. 그중에는 나치 독일에 맞선 유대인의 위대한 저항이었던 바르샤바 게토 봉기 참가자들도 있다.

최근에도 이스라엘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지의 극우 또는 파시스트 세력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극우·파시스트 세력의 무슬림 혐오에 편승하는 것인데, 이는 유대인 혐오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적이다. 서방에 사는 무슬림과 유대인은 지배자들이 "외부 세력"이라고 딱지 붙여서 속죄양 삼기 쉬운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갖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는 무슬림 혐오와 동시에 유대인 혐오 범죄도 늘고 있는데, 가해자 대부분은 우익 백인 남성이다.

제2의 홀로코스트를 막을 방법은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 유대인과 무슬림 등 모든 노동계급이 단결해 파시즘에 맞서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가와 시온주의는 그에 필요한 연대 건설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함정을 피하자

'유대인 로비'설은 편견에 따른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서방 열강이 이스라엘을 확고하게 지원하는 것을 비판할 때, 그 지원이 '유대인 로비'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됐다.

우선, '유대인 로비'라는 표현은 전 세계 모든 유대인이 단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전제하고 있고 이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실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 문제를 포함하는 많은 문제에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와 견해를 갖고 있다.

또한 '유대인 로비' 주장은 로비의 위력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그런 과장을 뒷받침하려고 음모론에 기대다. '유대인들이 정치·금융·언론 등에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밀

리에 공모한다'는 논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로비'는 극우와 파시스트들의 단골 소재이기도 하다. '유대인 로비'라는 표현을 '시온주의 로비'로 바꾸더라도 사정은 바뀌지 않는다.

물론 미국 등지에서는 시온주의 로비 단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미국 등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로비나 외압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이 서방의 중동 패권과 이익을 보존해 줄 "경비견" 구실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다.

'유대인 로비' 주장은 현실과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유대인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배격돼야 한다.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가해자가 됐다'는 비판은 부적절하다

홀로코스트의 피해자인 유대인이 "거꾸로 집단학살의 법정에 가해자로 불러 나왔다"(<한겨레>)는 등의 주장은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런 주장에는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대표한다'는 시온주의자들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로 희생당한 것과 그가 이스라엘을 지지했는지 여부는 전혀 별개 문제다. 나치는 가스실에서 유대인을 살해할 때 그가 이스라엘 건국 프로젝트를 지지하는지 따위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도 썼듯이 많은 홀

로코스트 피해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해 왔다.

시온주의자들은 '홀로코스트가 팔레스타인 강점(과 강탈)을 정당화한다'와 '이스라엘이 세계 유대인의 대표다'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들은 참말이 아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가해자가 됐다'는 논리는 시온주의자들의 이 두 거짓말 중 전자를 비판하면서도 후자는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억압을 비판할 때는 '이스라엘이 모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대표'라는 거짓말과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유대인은 홀로코스트로 죽은 숭한 희생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 부적절한 이유

홀로코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분명 유대인뿐 아니라 로마인(집시)은 이들을 멸시하며 부르는 표현이다. 사회주의자, 동성애자, 장애인도 많다. 그러나 유대인 사망자 수는 '터무니없다' '놀랍다'는 말로는 제대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예컨대, 나치 점령하 폴란드에서 유대계가 아닌 폴란드인은 약 300만 명이었는데 그중 9퍼센트가 홀로코스트로 살해당했다. 그런데 약 300만 명이었던 유대계 폴란드인들의 경우에는 92퍼센트가 살해당했다. 비슷한

일이 유럽 도처에서 재연됐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살해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흐리면, 진짜 유대인 혐오자들인 파시스트의 입지를 의도치 않게 넓혀 줄 수 있다.

파시스트들이 홀로코스트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어려울 때, 비슷한 주장을 종종 꺼내들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은 홀로코스트가 하나의 인종을 통째로 살해하려던 인종 학살이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의 숭한 비극 중 하나일 뿐이라는 식으로 치부한다. 이런 주장과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총선 참패에도 핵심 신자유주의 정책 지속하는 윤석열 정부

총선 바로 다음 날인 4월 11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9퍼센트로 집계돼, 지난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재정 적자 58조 원보다 29조 원이나 늘어났다. 국가채무 총액은 1126조 7000억 원으로, GDP의 50.4퍼센트를 기록해 최초로 절반이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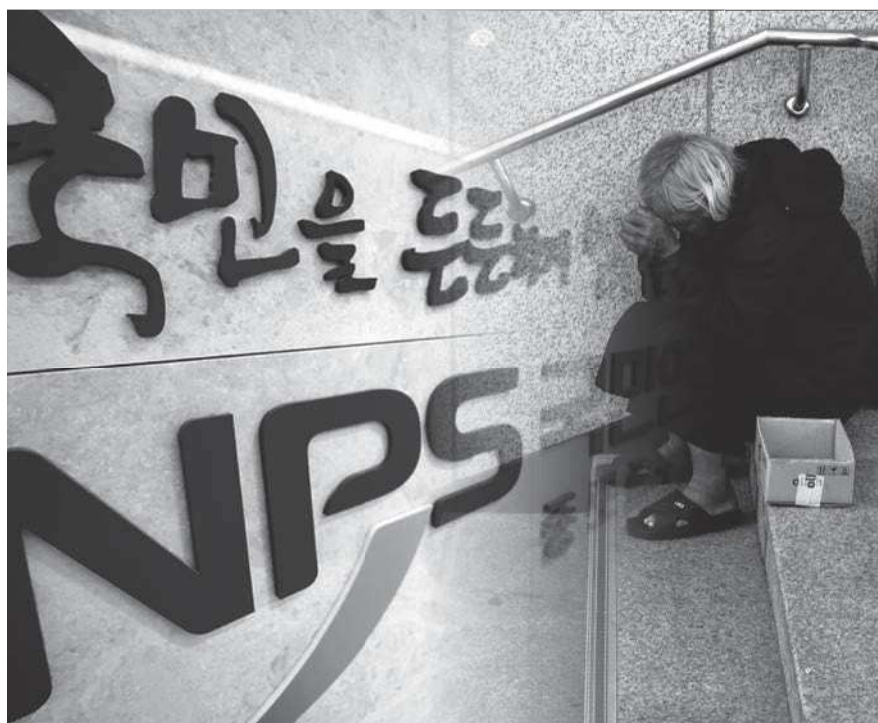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을 비난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재정준칙(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퍼센트 이내 관리하는 것) 법제화를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가 막상 대규모 재정 적자를 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사실이 총선에 악영향을 줄까 봐 국가결산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공개하는 꼼수를 썼다.

정부는 2022년 재정 적자 117조 원 보다는 30조 원 줄었다고 자화자찬한다. 하지만 환율 안정에 사용해야 할 외환평형기금에서 20조 원을 가져다 사용하고, 통상 예산대로 집행한 후 추후년도에 조정하는 지방교부세·교부금도 18조 6000억 원이나 앞당겨 감액했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 지난해 재정 적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평소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것이 무색하게 총선 전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민생토론회'를 열어 수십조 원어치의 재정 지출과 세금 감면 공약을 내놓았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키워 왔다.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공공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대폭 삭감도 복지와 공공서비스 악



정부가 기업주들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기업의 세금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것이다

화를 뜻한다. 지방정부 예산은 중앙정부보다 복지와 공공서비스에 사용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지출을 억제했음에도 경기 악화로 인한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부진해 불가피하게 적자가 커졌다고 해명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제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2022년(395조 9000억 원)보다 51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그러나 단지 경기 악화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도 세입 감소에 한몫했다. 정부가 5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법인세 등 부자 감세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건전 재정'으로 기업 경기가 회복되면 경제 성장과 세입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 주요국 모두에서 추진됐지만 약속한 바는 이뤄지지 않고 부채와 불평등만 커져 왔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참패하자 재정 긴축 기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권력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이를 우려하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총선 직후 나온 대통령의 입장문이나 정부·대통령실의 인사 개편 하마평을 보면 윤석열이 기존의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벌써부터 총선으로 연기돼 온 전

기·가스 요금이 다시 인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으로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크다며 말이다.

국민연금 개악

한편,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이 강조해 온 노동·연금·교육 '개혁' 중 먼저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총선 직후인 4월 13일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개최한 연금개혁 속의토론회가 생방송으로 방영됐다. 공론화위원회는 4월 21일 마지막 토론 후 수렴된 의견을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속의토론에는 두 가지 안이 올라가 있다. 소득의 9퍼센트인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퍼센트로 유지하는 2안이 그것이다.

1안은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금 늘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두 안 모두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폭(33퍼센트 또는 44퍼센트) 올려야 한다는 안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때문에 허덕이는데 앞으로는 매달 10만원가량 더 내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 '개혁'을 강조하

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앞으로 30년 후인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다며 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아 가는 적금 같은 것이 아니다. 국가가 보통 사람들의 노후 생활을 불가피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적자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재정을 투입해 국민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국민연금 지급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이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도 정부와 기업주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진다면 노동자들(현 세대든, 미래 세대든)의 부담이 늘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나 기업주들이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까닭은, 연금 지급으로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메울 기업 세금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민주노총·한국노총·진보당·정의당 등 주요 개혁주의 조직들은(국민연금 지급액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며) 보험료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앞서 언급된 1안인 듯하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들과 주류 언론이 퍼뜨리는 기금 고갈론을 부분적으로라도 수용해 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의 재원을 어느 계급으로부터 거둘 것인지 하는 진정한 문제가 흐려지게 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악화되는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자본주의 정부들처럼 재정 긴축과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털어 주려 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최악의 개악 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민주당이 흔히 그랬듯이) 일부 완화된 개악안을 통과시키는 데 그쳤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민연금 개악을 주도했다.

이런 점들은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개악을 저지하는 데 일관되리라고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 복지 지출을 늘리고, 기업주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높이려고 요구하며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싸워야 노동자와 기타 서민층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강동훈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수십 년간 자본주의
주요국 모두에서 추진됐지만
약속한 바는 이뤄지지 않고
부채와 불평등만 커져 왔다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외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을 증폭시키면서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한 원인의 하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정치적 공경에서 빠져나오거나 지지를 모으려고 ‘반일’ 제스처를 잠시 취한 일은 과거에 심심찮게 있었다. 가령 2012년 8월 이명박은 일본의 반발을 무릅쓰고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박근혜도 대통령 임기 초반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주장하며 한동안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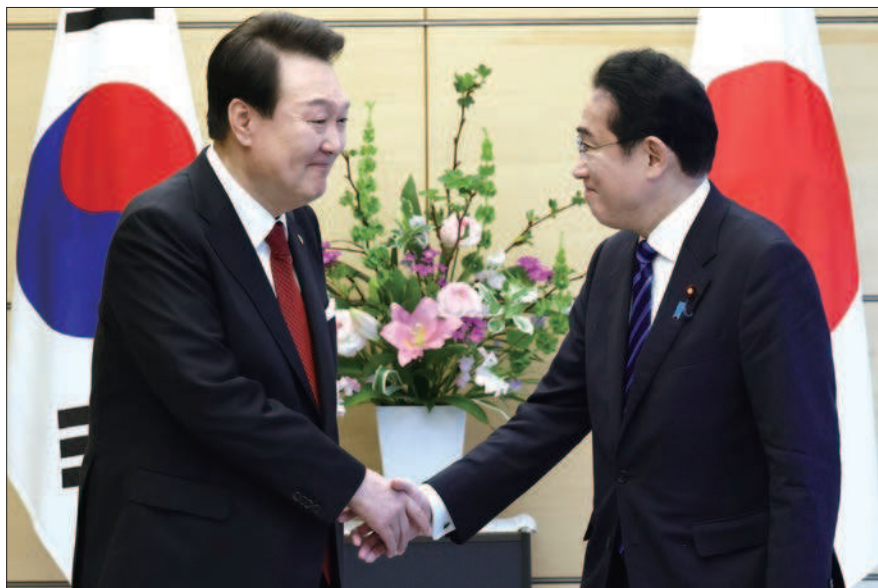
그렇지만 총선 이후 한국의 대일 정책이나 한일 관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외 정책을 정하는 데서 대중의 의사가 지속적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외 정책은 국제적 상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 권력자들은 민주주의보다는 제국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득실이 무엇인지를 우선시해 핵심 대외 정책을 결정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지배계급은 자기 이익을 위해 미국·일본 제국주의의 협력자 구실을 해 왔고, 그러한 3국 협력 구조 속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일본과 경제·안보 면에서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해 왔다. 이는 정권이 바뀌어도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과거사

미국도 자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안정적 동맹 관계로 묶으려 애써 왔다. 그래서 과거사 문제 등 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제들에 적극 관여해 왔다. 2015년 미국의 당시 국무부 차관 웬디 셔먼은 한국 정치인들이 민족주의 감정을 이용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한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측의 빠른 타협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더라도 1960년대 이후 양국의 협력 구도는 본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윤석열은 대일 외교 기조를 좀체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

질적으로 변함없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미사일 방어(MD)를 매개로 한 한미일 군사 협력이 진전됐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관여하에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고, 2016년 탄핵 위기 속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을 강행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 두 제국주의 강대국이 공공연히 적대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여기고 미국에 좀 더 유착하는 선택을 했다. 미국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듯한 경제적·안보적 이익을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윤석열은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책임을 면제해 줬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조차 반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대일 정책은 미국이 바라던 바였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삼고 거기에 호주·인도·한국·아세안 등 동맹국들을 연결해, 중국에 맞선 미국 중심의 기존 지역 질서를 지키려 한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쿼드, 오키스, 한·미·일, 미·일·호주, 미·일·필리핀 등 “지역 안팎의 연결망 구축”에 공들여 왔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으며(오키스에 일본 참여는 현재 공식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국의 동참을 촉구해 온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의 이런 요구에 적극 협력하며 한일 관계를 개선해 왔다.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이런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어떻게?

역대 민주당 정부들은 ‘균형 외교’를 주창했고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우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기대를 배신하는 선택을 해 왔다. 민주당도 (흔히 위기 상황을 이용해) 지배계급의 낙점을 받고자 하는 정치 세력이고, 따라서 대일 정책에서 ‘국익’(즉,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가령 2019년 한일 갈등 때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앞장서서 ‘반일’ 투사 행세로 포퓰리즘 정서를 끌어올리며 진보·좌파 사

회 운동을 포섭하려 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했고 위안부 합의도 폐기하지 않았다.

이번 총선 기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중국에 집적거리는” 윤석열을 비판하고, 총선이 친일 후보를 거르는 “신한일전”이라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친미·친일 외교와는 차별화를 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미국과 중국의 제국주의적 경쟁으로 한국의 운신의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너무 많이 양보한다”고 비판해 왔지, 일본 제국주의와 결별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또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한 구실 문제도 회피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의 강화가 동북아 지역 안보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의 대일 외교가 (제국주의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라는 대중에게) 배신적이었음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은 다시 집권해도 역대 민주당 정부와 얼마나 다를 수 있을까.

김영익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ws.or.kr/online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었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던 득표(90만 표)에서 더 추락한 것이다. 그것만 유지했어도 1석은 건졌을 것이다.

심상정·여영국 전 정의당 대표들도 3위로 탈락했다. 두 곳 모두 지난 총선보다 투표자가 더 늘었는데, 득표는 수만 표 줄었다.

10여 년 동안, 선거에서 대표 좌파 정당으로 진보 염원층의 표를 독식해 온 녹색정의당의 추락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엔 주류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을 이유로 대기가 어렵다. 득표 자체가 의석 확보 최소치에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제3당으로 독자 출마했지만, 정당 비례에서 686만 표나 받아 12석을 얻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 차선택이라도 선택하겠다는 표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양분한 것이다(민주당 756만여 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진보당 등이 얻은 표가 1400만 표 가량이다. 녹색정의당은 대부분 조국혁신당에게 표를 빼앗긴 셈이다.

그런데 정의당이 민주당과 거리를 뒀서 표를 잃었다는 일각의 평가는 맞지 않다.

정의당은 태생부터 민주당 개혁파와의 연립정부를 추구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개혁 염원층의 기대를 받고 있을(처음 절반 임기) 때는 민주당과의 협력이 선거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현명로 이어질 때도 민주당과의 공조를 지속하자 정의당은 지난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큰 추락을 겪고, 당세도 위축됐다. 이번 총선 지역구 출마자는 4년 전 75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2년간 생계비 위기의 고조, 친서방 외교로 인한 불안감, 정치적 반대파 탄압에 대한 반감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되살아났다.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진보당도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과 공조해 그 반사이익을 나눠가진 것이다.

(진보당이 인민전선체인 민주연합을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민주당과 결성한 것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보당은 독자적 노동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일방 종속되진 않았겠지만, 전략적 공조의 체결 때문에 노동자 투쟁 지원과 반제국주의 방침에 크게 제약이 생길 것입니다. 선거에서 득을 봤지만, 새로운 모순에 직면할 것입니다.)

반면, 최근 2년 동안 정의당은 조금 해져서 좌충우돌했다. 가령 몇몇 개혁 입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에 무비판적으로 공조했지만, 윤석열 퇴진 운동을 비아냥대고, 정적 제거용이 명백했던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두 번이나 찬성했다.

요컨대, 녹색정의당의 추락은 민주당과의 거리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 녹

색정의당의 추락은 윤석열 정권 심판(차선 또는 차악) 투표를 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지에서 녹색정의당이 빠진 결과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계급투쟁

이번 총선에서도 좌파는 개혁 염원 대중에게 가시적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계급투쟁이 파편화돼 좌파가 주변화돼 있고, 대중의 정치의식이 좌경화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수동화돼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심판 차선/차악 투표로 기운 이유다.

문제는 민주노총·정의당·진보당 등 주요 개혁주의 좌파 단체들의 노선이 이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개혁주의 지도부들은 노동자 투쟁의 파편화를 조장하거나 방치했고, 다중 위기에 대응할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길 회피했다.

정의당 지도부의 정치와 실천은 이런 과정에 큰 책임을 지고 있다.

정의당은 주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 투쟁·경제투쟁 분업 논리에 충실해 '운동'과 '정치'를 예리하게 구별하는 엘리트주의적 정치를 실천해 왔다. 정치란 '함께 비를 맞는 것(투쟁과 연대)'이 아니라 '우산(개혁 입법)'을 쥐어주는 것이라는 식이다.

정치 활동의 주 무대가 국회와 언론 노출로 옮겨지면,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어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의회 안에서 협상과 정치적 중재를 잘 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 된다. 대중 투쟁(특히 노동계급의)은 부차적인 일이 되거나 심지어 거추장스러운 일이 된다.

기층에서 운동을 건설하는 것은 종종 상식과 충돌하며 참을성 있게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다. 반면, 자본주의 선거에서 표 얻기는 언제나 상식에 부합해야 하는 일이다.

게다가 모로 가든 개혁입법만 통과되면 장땡이라는 식이면 결국 결정적 키는 민주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때의 '현실정치'란 개혁 요구나 행동 수위를 민주당이 용인할 수준으로 제한하고(민주당과의, 또는 때로 국힘 일부와의) 거래를 위한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민주당 개혁파가 아니라 정의당을 굳이 지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 투쟁과의 관계

정의당이 노동자 투쟁의 유기적 일부가 되는 것을 회피한 결과는 노동계급의 생활상의 요구조차 제대로 대변하지 않게 된 것이다.

녹색정의당이 많은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노동자 투쟁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한결같이 내 편인”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최근 정의당의 기후 정치는 유가인상, 금리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계비 위기에 빠진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유류세와 전기요금 인상을 감내하라고 훈계하는 것이었다.

생계비 저항을 정치화시켜서 언감생심 노동계급의 포퓰러 운동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2022년말 화물연대 투쟁에 당원들을 적극 동원해 연대하기는 커녕 의원단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당이 지난해 국민의힘·민주당과 합의해 통과시킨 전세사기특별법은(전세사기 피해자 공동대표 등이 정의당을 지지하며 입당했지만) 결코 개혁이라고 할 수 없었다.(당시 그 법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은 반대했다.)

노동운동에 뿌리 내리기를 소홀히 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윤석열 정서에도 정의당은 민감하지 않았다. 건설노조 양회동 열사 사망 이후에조차 윤석열 퇴진 투쟁에 함께하지 않았다. 양회동 열사는 유서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야당 대표들에게 윤석열 퇴진 투쟁을 호소했는데도 말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노조 건립에 일조한 SPC그룹(화성노조 파riba게뜨지회) 회장 허영인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가 총선 기간에 쟁점이 됐는데도(대변인 브리핑만 했을 뿐) 구속 촉구 대중집회나 집중 유세 방식을 쓰지 않았다. 성평등과 기후 문제를 소재로 서울 마포 선거구에서 중앙당 집중 유세를 두 번이나 벌인 것과도 대조된다.

요컨대, 녹색정의당이 많은 노동자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노동자 투쟁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에게 “한결같이 내 편인” 정당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가장 크게 표를 잃은 곳도 울산, 창원, 수도권의 노동자 밀집 주거지역에서다. 당을 대표하던 정치인들도 이곳들에서 수만 표를 잃고 낙선했다.

정의당은 노동조합 관료(고위 간부층) 안에서조차 기반이 축소돼 왔다.

최근 정의당은 노동중심성 회복을 말했지만, 관성 때문에 좌선회가 극도로 소폭이었고, 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노선의 수혜자였던 정의당 정치인들 일부(류호정, 박원석, 조성주, 배복주 등)가 그런 제한적 좌선회에 반발하다가 탈당해 흩어졌는데, 모두 정의당보다 오른쪽 정당들로 향했다. 당 지도자들의 이런 줌스러운 행태가 지지층 안에서 혼란과 불신을 낳고 있었는데도 심상정 전 대표 등 핵심 지도자들은 침묵했다.

결국 정의당 본체는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했다. 녹색정의당은 총선에서 기



후정치와 노동정치를 부각시키겠다고 했다. 비례 후보 명단을 보면, 녹색당 몫 후보가 2번이고, 1번인 나순자 전 보건노조 위원장 등 1·3·4번을 노동운동 출신 후보들로 채웠다. 여러 친노동 공약들을 내놔다. 그러나 실천을 인상으로 대체하기가 통하지 않았다.

젠더 갈등 유발형 페미니즘

정의당은 한때 수년간 젠더 갈등 유발형 페미니즘을 추수했는데, 이것은 노동자 운동 거리두기와 부정적 시너지를 일으키고, 계급투쟁의 파편화 조장에 일조했다.

노동계급 남녀의 단결 투쟁은 커녕 여성 노동자들의 중요 현안이자 계급 문제인 임금 인상, 정규직화, 고용 안정, 임신중지권 등을 위한 투쟁에도 당은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의당 페미니즘을 대표했던 류호정 전 의원, 장혜영 의원, 배복주 전 부대표, 오현주 전 대변인 등은 주로 미투 지지와 정치적 올바름, 피해자 중심주의에 불필요하리만큼 급진적으로 경도돼, 훈계나 하는 태도를 자주 드러냈다.(가끔은 우파가 그 과도함으로 인한 일방성과 허점을 이용했다.)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을 남성 일반의 낙후한 의식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볼 뿐 아니라, 또한 남성이 여성 차별에서 득을 본다고 흔히 여긴다. 심지어 남성 일반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반면, 여성들은 계급과 좌우를 넘어 단결할 수 있다고 보는(정체성) 정치로 흔히 이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그런 접근법은 여성 할당제를 늘려 국가와 정당의 고위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을 대단한 진보로 여기고 매우 중시한다.

이런 방식이 분별력을 잃으면 심지어 우파(이준석)와의 연대에 이를 수도 있음을 류 전 의원, 배 전 부대표, 오 전 부대변인 등이 보여 줬다.



정의당은 2년 전 불거진 노동과 페미니즘 등을 둘러싼 정치적 정체성 논쟁을 얼버무리면서 진지한 성찰의 기회를 흘려 보냈다

당 지지층 상당수의 부정적 인식, 당내 주요 페미니스트 정치인들의 탈당 등 속에서 정의당은 급진 페미니즘적 주장들을 누그러뜨렸었다. 그런데 여성계에서 이번 총선을 ‘백래시 총선’이라고 규정한 뒤로 급진 페미니즘적 주장이 선거운동에서 다시 부각됐다. 진정한 반성은 없었던 것이다.

근본적 사회 변화

정의당의 위기는 체제의 다중적 위기 심화에서 비롯한 정치 양극화 속에서 개혁주의가 겪는 모순을 보여 준다.

지배계급이 우경화하면서 협상과 중재로 개혁을 얻어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혁을 얻어내려면 노동자 투쟁은 더 커지고 보편화돼야 한다.

그런데 정의당이 추구한 예리한 정경분업은 노동자들이 가진 잠재력(이윤을 멈출 수 있는 힘)을 정치 권력을 목표로 하는 투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물론 이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형태 국가의 규칙에 충실한 결과다.

정의당 개혁주의도 노동자 투쟁을 한껏 고무하는 걸 스스로 제한하고, 한국 국가의 친서방 안보 노선을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정의당 일각에선 진보당을 배제하고

노동당, 민주노총 일부와 함께 더 좌파적인 개혁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을 고민하는 듯하다.

정치가 경제의 단순 반영물이 아니므로, 개혁을 제공할 경제적 여지가 크게 축소된다고 해서 개혁주의의 영향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새 리더를 내세워 세력간 연합을 하면 지금의 정의당보다는 조금 더 좌파적인 개혁주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일정한 선거 지지도 회복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사회 변화의 전망에 대한 노선 문제를 회피할 순 없다.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 계급투쟁 중심성, 개혁을 쟁취할 효과적 방법, 노동계급과 피억압자 운동이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개혁으로 충분한가, 정치 권력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은 결국 개혁이나 혁명이나 하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체제 전환”이라는 모호한 기치 아래선 이런 물음이 흔히 회피될 것이다.

이런 쟁점은 변화 염원 대중에게 필요한 정당이 어떤 것인지 묻게 한다. 노동자 대중의 자주적 행동을 고무하고 서로 연결시키고 정치화시켜 근본적 변화에 앞장설 진정한 좌파 정당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평 | 《잘못된 단어》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

어느 진보 언론인의 정치적 올바름 비판서

《잘못된 단어 -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이하 《잘못된 단어》)는 ‘정치적 올바름’(이른바 PC)에 대한 만만찮은 비판을 제기한다.

저자 르네 피스터는 독일의 진보 성향 주간지 <슈피겔>의 기자로, 미국 국가안보국이 앙겔라 메르켈의 휴대전화를 도청한 사건을 취재해 독일어권 최고의 기자상인 헨리안넨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던 시절 미국 특파원으로 일하며 정치적 올바름 문화에 대해 보고 느낀 것을 이 책에 기록했다. 저자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의 과도함과 독단주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는다. 그 사례들을 보면 국내에서 있었던 일부 유사한 일들도 떠오른다.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극우의 부상으로 표현의 자유가 공격받고, 좌파의 일부도 “혐오표현” 제한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 제한에 찬성하는 오늘날, 저자의 이런 비판은 경청할 만하다.

본격적인 서평에 앞서 정치적 올바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정치적 올바름은 넓게는 차별에 민감해야 한다는 정서와 문화를 대변하며, 차별적 언어 쓰지 않기, 언어 개혁, 소수자 우대 조치 등 여러 차별 개선 조치를 묶어서 일컫는다.

정치적 올바름이 표방하는 이런 조치들은 지지해야 한다.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깜둥이,” “변태,” “병신” 같은 노골적인 비하 표현은 물론, “절름발이 정책”처럼 무심코 쓰는 관용구도 피하는 게 옳다.

또, 트럼프나 한국의 이준석·하태경과 같은 우파가 차별 반대 정서와 그 운동 전체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비난하는 것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저자가 조목조목 짚듯이 정치적 올바름은 만만찮은 부작용도 내고 있다. 때문에 차별 반대 운동의 전진을 위해서 그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다.

요컨대,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혁명적 좌파의 태도는 비판적 지지여야 한다. (이는 저자가 비판 일색인 것과는 차이가 있다.)

《잘못된 단어》의 저자가 지적하는 정치적 올바름의 과도한 측면들과 그 부



정치적 올바름의 과도함과 도그마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작용에 대한 비판은 이런 출발점 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차별적 의도가 없는 말일지라도 공격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이 차별적 의도가 없거나 오히려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나온 말이라도 맥락을 무시한 채 공격하는 우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그가 든 사례는 다음과 같다. 2020년 시카고 일리노이대학교의 한 법학 교수는 직장 내 차별을 다루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면서 한 여성이 당한 언어적 모욕 사례를 제시했다. 교수는 그녀가 당한 ‘니그로’라는 흑인 차별적 말을 그대로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이 단어의 앞글자만 따서 ‘n…….’이라고 표기한 후, 이 단어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여성을 지칭하는 비속어”라고 각주를 달았다.

그러나 법학과 흑인학생회는 n이라

는 단어를 보기만 해도 “정신적 테러”를 겪었다고 항의했다. 교수는 임시 정적 처분을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해당 교수는 명백히 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비속어를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그런 언급조차 잘못이라는 건 분별없는 행동이다.

차별적 함의가 없는 말이나 창작물조차 차별적이라고 낙인찍고 비평과 비판을 넘여 작품을 아예 없애라고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 다수의 도그마주의를 보여 준다.

무조건 배척의 문제점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이 사안의 진상과 경중, 당사자의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찍어내고 배척하는 문제점도 지적한다.

그리고 정치적 올바름 문화 속에서는 “극히 작은 실수조차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은 누



잘못된 단어

정치적 올바름은 어떻게 우리를 침묵시키는가

르네 피스터 지음, 배명자 옮김
문예출판사, 232쪽, 17,000원

군가 한 번 잘못하면 무조건 배척하고, 이후 그가 공동체로 복귀하려면 무한히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2021년 《틴 보그》 편집장으로 영입된 흑인 기자인 알렉시 맥케먼드는 17살 때 트위터에 아시아 여성과 동성애자를 멸시하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맥케먼드는 2019년에 이 일을 사죄하고 글을 삭제했다. 철었던 10대 시절의 잘못이라면서 말이다.

그러나 몇 년 후 맥케먼드가 편집장으로 임명되자 《틴 보그》 편집자들이 맥케먼드 채용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17살 때 남긴 트위터의 스크린샷이 다시 인터넷에 등장했다.

맥케먼드는 더 높은 강도로 자책하며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사죄했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맥케먼드는 편집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사례는 녹색당 트랜스젠더 활동가였던 고(故)김기홍 씨의 사례를 떠오르게 한다. 김기홍 씨는 정치에 입문하기 전인 10년 전에 트위터에 몇몇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거센 국회의원 후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는 과거 언급에 대해 사과하고 후보에서 사퇴했지만, 온라인에서 맹렬한 비난과 트랜스 혐오적 비방이 이어졌다. 그 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에게 한 번 찍히면 명예를 회복할 길은 사실상 영구히 차단된다. 저자는 이렇게 지적한다. “이런 분노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분노의 대상이 직장이나 발언권을 상실해야 비로소 가라앉는다.”



사진 출처 Matthew Roth

차별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분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표현의 자유 억압 문제

저자는 부적절하거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장에 대해 비판을 넘어 짚어내고 배척하는 풍토인 '캔슬 컬처'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한다. (캔슬 컬처의 구체적 사례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효과적인 방법?'(본지 413호)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이 벌인 여러 강연 취소(노플랫폼)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이런 노플랫폼 전술의 무분별한 남용 경향은 특히 대학에서 강한데, 저자는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하고 논쟁하기보다는 발언권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우려를 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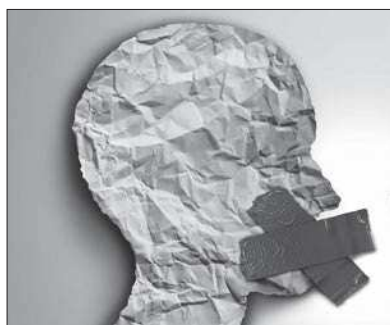
“학생들은 더 나은 주장을 펼치려 애쓰지는 않고 자신의 세계관 강화에 몰두했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자신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좌파는 콘돌리자 라이스(전 미국 국무부 장관)나 크리스틴 라가르드(IMF 총재) 같이 대중의 삶을 망가뜨리는 악행을 저지른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항의를 문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 '자격'이 충분치 않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강연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이견을 둘러싼 토론을 가로막는 문제점을 낳는다.

2021년 독일 하노버시는 정년 퇴임한 한 아프리카 역사학 교수를 초청해 인종차별 반대와 독일 식민지 역사에 대해 강연하고 젊은 활동가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그 교수는 독일이 과거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를 정부가 직시하게 하는 운동을 수십 년 동안 벌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일단의 활동가들이 이 강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가 아프리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는 늙은 백인 남성이라는 이유였다. 결국 하노버시는 행사를 취소했다.



한계와 약점

이렇듯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 지지자들의 과도함과 도그마주의에 따른 문제점들을 통찰력 있게 지적한다.

그러나 '진보'파에 동반되곤 하는 약점도 있다.

저자는 양극단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급진적인 주장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기도 한다. 가령 저자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내에서 제기된 경찰 예산 삭감 구호나 경찰을 '쓰레기'라고 규탄한 것과 같은 옳은 주장도 국민 대다수의 정서에 맞지 않고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또, 저자는 정치적 올바름이 트럼프 같은 우익을 득세하게 만들어 민주당이 패배했다고도 주장한다.

미국 민주당은 진정한 개혁을 제공하지는 않으면서 정치적 올바름의 몇몇 언사를 사용해, 트럼프를 지지한 노동자들을 “개탄스러운 자들”이라 경멸했다. 물론 이것은 이들을 정서적으로 이반케 하는 효과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진정한 원인은 민주당이 급진적이었다거나 정치적 올바름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 진정한 이유는 민주당의 개혁 약속 배신, 기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서민들이 환멸을 느껴 민주당에 냉담했던 것이다.

민주당은 또한 전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오바마 정부 때 시작됐고, 바이든

정부는 임신중단권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안

이 책은 정치적 올바름에 몇몇 난점이 있음에도 차별에 맞서는 사람들이 왜 이 정서와 문화에 이끌리는지, 또 차별에 맞선 더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서도 공백이 있다.

정치적 올바름 정서와 문화의 확산은 수년간 급진화가 전개됐지만 차별 완화의 근본 동력이 돼야 할 계급 투쟁의 수위는 낮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시기에 급진화된 세대는 각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반감을 갖고 있지만, 차별을 낳고 온존시키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강력하게 도전하는 집단적 투쟁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차별에 도전하기 쉽다.

좌파가 '특권 이론'이나 정체성 정치를 수용하며, 차별의 원인을 개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 찾고, 이들을 공격하고 배척하는 데 초점을 맞춰 온 것은 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올바름의 핵심 전략은 노동계급 대중 투쟁으로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기보다는 권위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차별 반대 조치를 위로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은 중간계급 지향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차별과 계급 문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정치적 올바름의 가장 큰 난점이다. 그런 접근법은 차별을 온존케 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개개인들을 차별의 원인으로 여겨 그런 개인들을 주된 공격대상으로 삼기 쉽다.

그렇기에 정치적 올바름은 그 지지자나 반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급진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혁명적이지 않고 명백히 개량주의적이다.

특히, 운동 내 일부 개인들이나 단체들을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은 대중 운동을 어렵게 만들기 쉽다. 그런 사람들을 낙인 찍고 밀어내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도 함께 투쟁하고 운동을 키우면서 편견에 도전하는 토론과 논쟁을 해야 한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대중은 편견을 깨고 의식과 언어, 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양효영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 공저자



이상 기후, 전쟁 ... 다중 위기 속 오르는 물가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 추진

정선영

사과, 대파 등으로 대표되듯 지난 몇 달간 과일·채소 가격이 크게 오르며 노동자 등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됐다. 통계청 발표를 봐도 올해 3월 과일 값은 지난해 대비 40.9퍼센트, 채소는 11퍼센트 올라 신선식품지수(기상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의 식품 가격 지수)는 19.5퍼센트 증가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3퍼센트를 웃돌고 있다. 2022년 5.2퍼센트, 2023년에 3.6퍼센트 오른 데 이어 고물가의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과일, 채소 가격 급등은 이상 기후의 영향이 크다.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정부가 물가(특히 식료품) 억제를 위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일이 자주 벌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고물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과 대신 바나나를 먹고, 몇 가지 채소는 생략하고 요리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로도 음식료품 소매판매는 2년 연속 줄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농축산물 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지원 규모가 1가구당 6500원 정도로 적을 뿐 아니라, 시장 구조 속에서 중간 상인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분



사진: 이영민/공동체연구소

총선에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초점이 된 물가 상승.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이 다 돌아가지도 않았다.

게다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주류 언론들이 재정 적자 우려를 부각하고 있다. 총선에서 표를 의식해 정부가 “무제한·무기한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했던 말은 아래로부터 큰 압력이 없다면 공문구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긴축 공격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들의 아우성이 컸는데도 정부는 당장 6월

1일부터 가스비를 또 올릴 공산이 크다. 지난 2년간 40퍼센트나 오른 전기요금도 향후 더 인상할 것이라고 한다. 하반기에 수도권 지하철 요금도 추가로 150원 오를 예정이다.

최근 중동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며, 유가가 급등하고, 환율도 오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공기업들의 적자가 커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전기·가스 공급, 대중교통은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없어서 안 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다. 당연히 무

상으로 제공되거나, 정부가 지원해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돼야 할 공공요금을 원료 공급가의 변동에 연동하게 한 것(연료비 연동제) 자체가 문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막대한 기업 감세만 되더라도 충분히 값싸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에도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고, 9조 4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돈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이 성장해야 한다.

실질임금 떨어뜨리는 물가 상승

물가 인상 속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

실질임금은 2022년 -0.2퍼센트, 2023년 -1.1퍼센트로 2년 연속 하락했다.(통계청 발표)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실질임금 감소를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 공공부문 실질임금은 3년 연속 하락했다.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2021년 1.5퍼센트, 2022년 1.2퍼센트, 2023년 2.4퍼센

트에 불과해 3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6퍼센트포인트 넘게 적었다.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도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잡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행해졌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을 고려하면 지난 몇 년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줄었을 것이다. 올해도 현재 물가 상승률이 최저임금 인상률(2.5퍼센트)보다 높은 3퍼센트에 이르고 있

다.

일각에서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상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도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지난해 300인 이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1퍼센트 하락했다.(통계청 발표)

이런 사례들은 임금 하락으로 인한 생활고가 단지 특정 부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계급 전반이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이번 총선 기간에 정치권에서 임금 인상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민주당이 물가 인상을 별충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안을 냈다. 이런 지원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만큼 일회성 지원으로 임금 인상을 대체할 수는 없다.